

## 22대 국회 초반부터 '파행'

## 과반 의석 무기 휘두르는 野 vs 대안없이 역풍만 기대하는 與

여야, 상임위 배분 놓고 평행선  
민주, 18개 중 11개 상임위 제출  
우원식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소집"  
추경호 "건제·균형으로 중립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야당의 독주로 인한 '역풍'만 기대하고 있어 원 구성 차질에 따른 국회 일정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대한민국 전 분야의 업무를 18개의 상임위 체제로 나눠 입법·예산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며, 상임위가 꾸려져야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연금개혁, 첨단산업 육성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새 국회가 일을 시작할 틈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지난 7일에도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추경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배분을 합의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8개 중 11개의 상임위원장 몫을 먼저 선출하는 원 구성안을 제출했다. 여야의 쟁탈전이 벌어진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두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으므로 법안 통과와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법사위는 원내2당이 맡아야 하고, 대통령

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는 집권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빠른 속도로 다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특히 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아가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와야만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빠른 속도로 눌러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본회의 소집했다"며 "민생이 절박하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 문을 열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도 매우 높아져서 국민도 불안해 하고 다음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도 많은 걱정을 받고 있

다"며 "그래서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의장으로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실이다. 큰 틀에서 절반의 야당, 절반의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동원해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의장이 계신 것"이라며 "여도 야도 아닌 어느 정파에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 서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결국, 합의 없는 정치는 민생고에 시름을 더하고 있는 국민에 손해만 끼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종향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 등 3개의 특검법안을 내놨고,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숙 여사의 인도 타지말할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할 기회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대용량 더 좋아요”... 고물가 시대에도 ‘창고형 할인점’ 상승세

가격 거품 걷어내고 가성비 내세워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출 8.6% 늘어  
롯데마트 맥스, 지난해 대비 10% ↑

#직장인 안 모(38)씨는 “창고형 매장은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투박한 데에 오는 매력이 있다. 특히 가성비 좋은 상품들이 많다. 우리집은 2인 가족이라 대용량을 소분해 부모님과 나눈다. 소분돼 있는 상품보다 30%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에 자주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내 창고형 할인점이 고물가 시대를 맞아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물가가 2년 넘게 고물가로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제품들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용량이어도 가성비가 좋다면 지인과 나누던가 소분해 쟁여놓는 등 저마다 방식은 다르게 창고형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



트레이더스 동탄점에 마련된 티 스탠드 매장. /이마트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은 올해 1~4월 매출이 8.6% 늘었다. 전반적인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이마트(-1.0%)와 노브랜드 전문점(-7.8%) 매출 추이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레이더스의 점포당 매출액도 533억원으로 이마트(296억원)의 2배에 가깝다.

현재 트레이더스 매장은 22개, 이마트는 133개에 비해 점포수가 적은 상황에

서 거둔 실적이라 의미가 더욱 깊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축산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늘었다. 직접 소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소분 상태의 제품에 비해서는 최대 35%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냉동 과일·채소 매출도 각각 38%, 30% 올랐다. 트레이더스 내 푸드코트인 'T카페'의 1~5월 매출도 20.5% 증가하며 호황을 누렸다.

트레이더스 관계자는 “최근 외식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장을 보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까지 간편하게 해결하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6곳에서 운영 중인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인 '맥스'도 올해 1~5월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 오른 수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분기 기준 롯데마트 국내 할인점(-1.3%), 롯데슈퍼(0.9%)와 큰 차이를 보였다.

바나나, 오렌지 등의 수입산 과일(40%), 수입 돼지고기(25%)가 특히 눈에 띄게 성장했고, 맥스 전용 자체 브랜드(PB) 우유(20%), 가공식품 등이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창고형 할인점 상품 가격은 대형마트에 비해 평균 10~15% 저렴하다. 이에 많은 고객들의 발길 유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트레이더스 측은 “오는 2026년까지 2

개 매장 이상을 출점할 계획”이라며 “백스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가 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창고형 매장이 일반마트보다 낮은 가격에 선보일 수 있는 이유는 상품 효율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별 상품 포장기 아닌 박스 단위로 상품을 선보이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가장 필요한 상품만 대량 매입해 가격 거품을 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형마트의 약 30%에서 많으면 50% 낮은 수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실제, 창고형 할인점 상품 가격은 대형마트보다 평균 10~15%가량 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2019년 6조8644억원 수준이던 한국의 창고형 할인점 시장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 9조9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14년간 사회적 업무 일자리 7% ↑... “AI시대, 소통·협동 중요”

한은, BOK이슈노트 보고서 발간  
사회적 능력따라 임금보상 높아

지난 14년 간(2008년~2022년) 사회적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는 7%포인트(p) 증가한 반면 전문 기술인 수학적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는 5.3%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기술이 확대되면서 수학적 업무보다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소통·협동하는 사회적 업무 능력이 중요해진 탓이다.

앞으로는 교육현장서 수학적 기술 만큼이나 사회적 능력을 계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에 따르면 지난 14년간 사회적 업무와 관련된 노동투입은 9.6% 상승했다. 수학적 업무가 6.8% 증가하고, 반복적 업무가 1.1%로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다.

오삼일 조사국 고용분석팀 팀장은

“노동시장의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사회적 업무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 **소통·협동 필요한 일자리 7%p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업무 강도가 높은 일자리는 14년간 총 7%p 늘었다. 사회적 업무 강도와 함께 수학적 기술 강도가 높은 경영관리자, 대학교수, 약사, 간호사 등은 4.7%p 증가했다. 사회적 업무 강도는 높았지만 수학적 기술 강도가 낮은 사회복지사, 법률

전문가, 작가 등은 2.3%p 늘었다. 수학적 기술 강도만 높은 회계 및 경리, 자동조립라인 조작원 등은 5.3%p 늘었다.

반면 사회적 업무 강도와 수학적 기술 강도가 모두 낮은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조리사 등의 일자리는 7.6%p 줄었다.

오 팀장은 “노동시장 전반에 쓰이는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업무 강도와 수학적 기술 강도가 모두 낮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적 능력에 따라 임금보상도 커져**  
아울러 전문기술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협동을 잘하는 이들도 임금보상이 이뤄졌다.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은 경우 임금은 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을 추가해 학력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을 제한하더라도 사회적 능력에 따른 임금보상은 존재했다. 일을 잘하는 실력(수학적 기술) 만큼이나 타인과 화합하는 실력 또한 갖추는 것이 임금상승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임금보상이 더욱 증가했다. 개인의 사회적 능력이 1단위(1표준편차) 높을 때 임금은 2007~2015년 4.4% 올랐고, 2016~2020년에는 1.5%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115@